

# 한국의 특성으로 바라본 한국형 시민사회의 도입 요건

무은재학부  
20180295 김현주

<목차>

1.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황과 시민의 정의
  - 1-1 국민과 개인이 만연한 한국 사회
  - 1-2 시민 개념의 탄생
  
2.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로 살펴본 한국형 시민의 요건
  - 2-1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 2-2 한국형 시민의 요건
  
3. 대한민국의 시민 사회를 위해 국가 및 개인이 나아가야 할 길
  - 3-1 국가 차원의 노력
  - 3-2 개인 단위의 노력
  
4. 결론

\* 참고문헌

# 1.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황과 시민의 정의

## 1-1 국민과 개인이 만연한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시민'은 웬지 그 어감이 낯설다. 오히려 '국민'과 '개인'이 더 친숙하게 들린다. 한국에서 시민은 '시(市) 거주자'라는 뜻으로 '군민(郡民)', '동민(洞民)'과 병렬관계에 있는 개념이며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대담화를 할 때에도 '시민 여러분' 보단 '국민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자주 선택한다.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뛰어난 단합력'으로 정리된다. 고려시대 이후 약 천 년 간 통일국가를 유지한 유서 깊은 역사, 좁은 국토와 1억도 되지 않는 인구 수, 한민족(韓民族) 사상을 대한민국 국민을 집합시키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실제로 내란이 아닌 '민주화운동'으로 독재정권, 적폐정권을 물리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드물다. 그러나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촛불시위(5.18 민주화운동은 우선 제외하고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다.)가 시민운동이 아닌 국민운동이었던 이유는 다음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운동의 결과가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낳았지만 대한민국 시민의 공유코드를 형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하야, 직선제, 중임제 폐지, 대통령 탄핵 등이 바로 위에서 열거한 민주화 운동의 결과였다. 그렇게 목적을 달성한 민중은 다시 흩어졌다.

이 외에도 국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1997년 한국 IMF 경제 위기가 있다.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은행, 정치인, 연예인을 비롯하여 일반 사람들까지 집에 있는 금반지 등을 털어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 전국 누계 약 351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렇게 모인 돈은 약 21억 3천 달러에 이르렀다. '제 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의 애국심과 단합력을 볼 수 있었고, 덕분에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긴 2001년 8월,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게 된다. 이렇듯 대한민국에는 언제나 시민이 아닌 국민이 있었다. 나라에 불만이 있으면 같이 모이고, 위기가 닥치면 같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문제는, 1960년의 4.19혁명, 1987의 6월 민주항쟁, 그리고 2017년의 촛불시위와 그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민주화 운동들, 이렇게 최근까지도 지속되어 온 민주화운동에서 국민이 단합할 시간은 있었지만 시민사회가 형성될 여유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이 힘을 모아 해결한 IMF 외환위기 이후 돌아온 것은 냉혹한 자본주의의 현실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류층과 중산층의 격차가 '극심한 속도로' 벌어졌고 이는 '남보다는 내 밥그릇을 먼저 챙기는' 경쟁주의, 개인주의 문화를 자아냈다. 국민 다음은 시민이어야 하는데 국민 하위 개념이 바로 개인이 되어버렸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는 '개인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은 특정 인연을 매개체로 한 사적 공동체를 일컫는다. 한국의 개인주의는 고질적 문화<sup>1)</sup>와 근현대 정치·경제적 상황이 빚어낸 결과였다. 특히, 한국 근현대 정치 상황을 살펴보자. 6070 부모세대 사이에 유행한 명

---

1) 조선의 근본 사상은 유교, 그 중에서도 성리학으로 '충'과 '효'를 최고 덕목으로 삼는다. 즉 조선의 선비들은 '수기치인(修己治人)'하여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부모와 나라에게 충과 효를 다했다. 어렸을 때부터 서당이나 향교 등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으며 이렇게 같고 닦은 글재주로 과거를 치렀다. 과거에서 급제하면 나라에 녹을 받는 관리가 되었으니 그 당시 과거가 현대 공무원 시험인 셈이다. 지리적으로 좁은 나라였던 탓에 한 가문이 득세하면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 철종 때 안동 김씨 가문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방 교육 기관인 향교에서 배출된 유생들이 '어디서, 누구 문하에서 수학했는지'로 자연스레 파가 나뉘었으니 학연, 지연, 혈연(이하 혈지학연)이 실로 이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당파 싸움이 치열해져 숙종 때는 세 차례의 환국으로 서인과 남인, 서인이 순서대로, 정조와 순조 때는 각각 노론의 시파와 벽파가 득세하여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 이렇게 혈지학연 중심 세습주의 문화가 오늘날로 이어져 재벌, 기업의 가족경영, 과도한 경쟁주의와 이기주의로 발전했다.

언이 있다. “세 시간 자면 불고 네 시간 자면 떨어진다.” 즉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학력고사를 잘 치르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고, 그 당시 좋은 대학이란 곧 성공의 다른 말이었다. 한창 경제가 성장할 시기여서 좋은 대학은 취업을 보장했다. 미국처럼 땅이 넓거나 유럽처럼 대학 평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대학은 곧 서열화 되었으며 그 기준은 수험생들의 수학능력 점수였다. 조선의 과거제에서 이어진 학력고사, 수능이 공부를 등용문으로 고착화시킨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 첫째, 학벌주의 문화가 경쟁을 가속화시킨다. 자녀의 사교육 지출 비율 증가, 청년 실업률 증가, 공무원 시험 응시자수 증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예전처럼 ‘공부만 하면 취업했던’ 세대를 넘어 ‘공부를 해도 힘든’ 시대가 된 것이다. 타인을 신경 쓸 동안 자신의 밥벌이, 자신의 안정적 직장과 가족의 일신만을 챙기기도 바쁜 사회가 되어버렸다. 둘째로, 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주고 민주화의 의의나 시민 사회의 가치를 터득하게 하는 대신 ‘국수영탑’ 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뤘다. 심신 수양에 필수적인 예체능, 도덕 등의 과목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고 빠른 암기능력과 계산실력만을 갖게 강요했다. 저녁까지 이어지는 학교 수업, 그 이후의 야간자율학습, 그 이후의 사교육, 이렇게 바쁘고 고단한 삶 속에서 타인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 성찰할 시간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렇듯 한국의 경쟁사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나와 혈지학연으로 이루어진 사적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깔려있다. 국민과 개인이 만연한 시대에 과연 한국은 어디서 ‘시민사회 도입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 1-2 시민 개념의 탄생

시민사회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사회를 정치공동체(koinonia politike)와 동일시한 것처럼,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정치 참여를 함으로써 비로소 ‘선한 시민’이 되고 공동선을 형성, 실현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정치공동체란 공공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개인, 가족 등의 사적인 것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아테네의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따로 ‘시민’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었으며 국민이 곧 시민이었다. 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정치학>에 등장하는 ‘정치공동체’는 르네상스 시기 레오나르도 브루니에 의해 ‘소에타스 키빌리스(societas civilis)’로 번역되는데 이것이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말의 시작<sup>2)</sup>이다. 이렇듯 유럽의 고대 시민사회는 정치 등 특정 목적을 공유한 공동체에 방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절대왕정 시기에 등장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잠시 잊었던 시민 개념을 재정립하기 시작하였다. ‘사회계약론’, 혹은 ‘시민사회론’을 재창한 그들은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며 이를 권력의 발원체로 격상시켰다.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존재, 즉 공동선(홉스), 일반의지(루소), 사회협약을 담당하는 권력체 구성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자유를 보장받는 존재를 바로 ‘시민’이라 일컫은 것이다.

<나는 시민인가>의 저자 송호근 교수는 시민의 요건<sup>3)</sup>을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한다.

첫째. 신분질서에서 벗어나 계약질서로 맺어진 독자적 개인들

둘째. 전통적 이해관계(혈연, 지연, 학연)에서 벗어난 개인들

셋째. 공익의 중요성에 눈 뜬 개인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의 시민사회를 ‘국가, 기업과 협력하면서 때로는 대항하며, 공동선을 추

2) Tanvir Anjum,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in Europe: From Aristotle to Gramsci”, *Journal of Political Studies*, 2010, p.149

3) 송호근, 『나는 시민인가』, 문학동네, 2016, 292쪽

구하는 자발적, 비공식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이하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렇게 정부, 정당 등 정치단체와 시장은 시민사회와 구별된다.

비정부기구(NGO), 비영리단체(NPO) 등은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이 외에도 규모와 목적, 특징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단체, 조직, 집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시민사회의 공간을 이룬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국형 시민의 요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에 시민사회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국가와 개인 단위로 각각 제시할 것이다.

## 2.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로 살펴본 한국형 시민의 요건

### 2-1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예는 NGO(비정부기구)<sup>4)</sup>, NPO(비영리기구), CSO(시민사회단체), VO(자원활동조직) 등이 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서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분류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 중 가장 들어봤음직한 NGO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천만 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며 흔히 들어본 UNESCO 등의 자선단체도 NGO로 분류된다. 한국은 주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특히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등장 이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등 환경 개선과 인권 신장을 위한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설립<sup>5)</sup>되었다. 본격적인 사회적 지지를 얻은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부터인데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봉착한 한국 사회의 원인 진단, 책임 규명, 극복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비공식적이지만 어쨌든 잘 조직화, 규모화 되어있는 NGO 등의 단체 말고도 비정기·비장기적 조직, 점조직 등도 모두 앞에 제시한 시민사회의 정의에 잘 부합한다면 시민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비정기·비장기적 시민단체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예가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에서만 일어났던 생존투쟁이었다는 점에서 타 민주운동과 극명하게 구분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광주 시민들이 그 무정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규율을 지키고 서로를 도왔다는 점이다. 병원과 상점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자발적으로 구호물품, 식품을 나누어주었다. 매점매석을 방지하여 생활필수품을 최대한 고르게 분배하였으며 주부들은 시민군들에게 김밥을, 가게들도 빵, 우유를 무상으로 내놓았다. 차량에 번호를 붙여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힘썼다.<sup>6)</sup> 누구도 규율을 강제하지 않았고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시민들은 도둑질이나 다른 폭력적인 행위로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다. 그야말로 '시민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봉사, 기부를 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집합은 점조직 시민단체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특히 재난이 일어났을 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이재민을 위해 아무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모금에 동참하는 행위에서 시민성을 엿볼 수 있다. UNICEF, save the children 등의 자선단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시민단체에 소속되어서 봉사, 캠페인을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종류의 시민사회가 한국사회에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 영향력, 참여율 등이 타 국가와

4)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시민, 개인, 민간단체에 의해 조직된 단체.

5) 박상필, "199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기억과 전망, 2012, 162~163쪽

6) 김진경, 『5.18 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68~69쪽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다. 1-1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뿌리가 약하고 특히 청소년, 청년 등에게 존재감이 열다. 실제로 2016년 OECD에서 공개한 한국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국민들의 시민단체 참여율은 덴마크 86%, 영국 80%, 영국 80%, 네덜란드 75%, 독일 57%가 각각 1~5위를 차지했으나 미국 19.7%, 일본 13.2%, 한국 6.4%로 한국이 현저하게 낮았다. 또한 연국의 자선구호재단(CAF)과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각국 19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도 세계 기부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대상 153국 가운데 탄자니아와 함께 공동 81위에 불과했다. 나라 GDP 대비 개인 기부금 비중은 0.54%로 미국(1.67%), 영국(0.73%), 캐나다(0.72%) 등에 한참 못 미친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 2-2 한국형 시민의 요건

2-1에서 언급한 여러 시민단체의 예시들을 통해 시민단체의 각 구성원인 시민의 요건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권익 수호의 주체가 국민이 아닌 특정 공동체라는 것에서 국민과 구분된다. 둘째로, 1차 수혜가 개인이 아닌 타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에서 개인과도 구분된다. 셋째, 자기희생적이라는 점에서 NIMBY(Not In My Back Yard)와 같은 집단이기주의와 구분된다. 넷째,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며 이 때 모인 시민들은 혈지학연으로부터 자유롭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자기희생정신'과 '자발성'이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시민의 요건에서 언급된 '자기희생정신'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가미카제와 같은 세뇌된 희생이 아니다. 인간이기에 우러나오는 이타심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2018년 tvN 방영 드라마 <라이프>에 나온다. 스위스 어느 마을에 핵폐기장 건설 투표를 했는데 처음에는 60%가 찬성하였다. 후에 정부가 핵폐기장을 건설하면 돈을 주겠다고 발표하고 재투표를 하니 찬성률이 25%로 떨어졌다. 어딘가는 지어야 하니까 찬성한 마을 사람들의 희생정신과 배려 정신, 책임의식이 돈이 개입되자 수지타산적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전자를 건전한 시민 사회로, 후자가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로 물들어버린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대응시켜 볼 수 있겠다. 이렇듯 한국의 NIMBY 현상은 심각하며, 시민이 부채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7년에도 강서구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했는데, 기피시설에 장애인 시설이나 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만연한 한국에 시민단체를 꽃피우고, 궁극에는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 3. 대한민국의 시민 사회를 위해 국가 및 개인이 나아가야 할 길

### 3-1 국가 차원의 노력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과 개인을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선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상류층이 기부와 착한 세금 납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중산층이 무조건적인 NIMBY를 외치기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는 사회를 진정한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진부한 대답이지만, 시민사회 건설의 핵심 키워드는 "교육"이다. 국영수탐 위주 교육, 보여주기 식 비교과 활동에서 벗어나 자선단체·비영리단체의 종류와 가치, 각각의 하는

일을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우고 실제로 여러 시민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시민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 환경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 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과도한 혈지학연은 내 밥 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가족주의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정신을 결여시킨다. 따라서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가족주의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개선한다면 오히려 자율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시민단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스웨덴을 가장 적합한 예시로 들어보면, 학생 대출을 통해 청소년의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고,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향상시켰으며, 높은 수준의 육아 휴직 제도를 통해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켰다. 그 결과, 1981~2015년 동안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스웨덴은 항상 ‘세속적, 합리적 가치7’, ‘자기표현 가치8’가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혔다. 이렇듯 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집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 3-2 개인 단위의 노력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청소년들은 한국의 개인주의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 필자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한창 화두에 올랐었는데 그분은 “굳이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이상한 소송에 휘말리지 마라”고 할 정도였다. 청소년 중 대다수는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봉사의 본질을 잊은 채 시수 채우기에 급급해하며 학자금 대출 등 넉넉지 않은 지갑 사정으로 기부를 하는 일도 드물다. 물론 ‘답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냉랭한 한국의 개인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해야 하는 노력은 2-1에서 언급한 시민단체에 참가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역시 봉사와 기부이다. 그렇게 거창한 일도 아닌 것이, 고등학교, 대학교의 동아리에 가입하여 캠페인, 봉사활동에 참여해도 되고, 그도 아니면 개인 단위로 기부,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다. 좀 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NGO, NPO 등의 여러 단체에 가입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권장한다.

둘째로, 국민 개개인이 물질적 가치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몇 년 전 중산층 기준에 대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가 화제가 됐다. 여기서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아파트·자동차 보유 유무, 예금 1억 원 이상, 해외여행 연 1회 이상 등 물질적인 측면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비해 프랑스의 경우 외국어 가능 여부, 스포츠·악기연주 가능 여부, 정기적 봉사활동 참여 여부 등 정신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었다. 이렇듯 타인과 나를 경제적으로 비교하다보면 내 것을 잃지 않고 싶게 되고, 자기희생정신은 당연히 희미해진다. 금전적 욕심보다 양보와 배려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시민의식의 시작이다.

7) 종교, 전통적 가족가치, 권위의 중요도가 낮고 이혼, 낙태, 안락사 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

8) 환경보호, 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이 높고 성평등, 경제적, 정치적 삶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의 요구가 높음

## 4. 결론

시민사회의 기원은 유럽으로, 17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 의식이 발전해나갔다. 이에 반해 한국은 경제적 성장과 정치·사회적 성장에 시차가 분명히 있었으며 그 기간들이 짧았다. 산업화, 민주화 운동을 하며 국민성을 기르고, 이후 과도한 경쟁 사회에 돌입하며 개인이 만연했지만, 그 기간 사이에 시민이 생길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시민’은 각 시의 주민이라는 행정적 의미가 짙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이나 여러 시민단체의 설립, 모금, 재해 구호 운동, 봉사활동, 캠페인 활동 등 시민 운동이나 시민 단체의 존재는 대한민국에도 시민사회를 건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민은 국가 자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권익을 수호한다는 점에서 국민과 구분,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이타성과 자율성, 자기희생정신을 지닌다. 시민보다 국민, 개인이 익숙한 대한민국에 시민사회를 뿌리내리려면 정부와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에서는 입시와 출세를 위한 교육보다는 시민단체 가입을 장려하고 복지제도를 개선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가족주의를 타파하고 개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개개인이 여러 시민운동에 참여하여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버리고 양보와 배려 정신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한국에 하루빨리 시민사회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진경, 『5.18 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 송호근, 『나는 시민인가』, 문학동네

#### 2. 논문

- Tanvir Anjum,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in Europe: From Aristotle to Gramsci", *Journal of Political Studies*, 2010

#### 3. 기타자료

- 뉴스메이커, “나눔의 미학’ 기부, 남이 아닌 나부터”,  
<http://www.newsmaker.or.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822>, 2011.12.04.
- 더지방포스트, “님비(NIMBY) 대신 (NIMBI-주민참여)로 기피시설 갈등 해법”,  
<https://blog.naver.com/nlncm/221107016603>, 2017.11.02.
- 한겨레, “중산층, 프랑스·미국·한국 기준 따져보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12705.html>, 2015.10.13.
- 한겨레, “[유레카] 시민사회/김지석”,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5615.html>,  
2014.09.17